

##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홍순직·이용화 /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소

###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19~12월 2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연초 전망치보다는 긍정적인 응답률(81.8%→ 51.7%)이 급감하여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응답됐다. 한편,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당수(73.6%)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은 98.9%가 확대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중 FTA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8.2%가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는 전문가 10명 중 약 9명(89.0%)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제안이 많았다.

### □ 2014년 4/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9.3을 기록함으로써 올 들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8p 하락한 40.7을 기록해 전망은 부정적 평가로 반전되었다.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8p 소폭 하락한 31.3으로 반전됨으로써,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하락세로 반전되어 4/4분기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회복한 반면,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체감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4년 남북관계는 연초 기대와는 달리, 긴장과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연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이후, 상호 비방과 중상 중지 등의 중대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 수용 등 화해적 태도를 보였다. 남한도 통일대박론 및 드레스덴 구상을 제안하면서, 5.24 조치 완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고위급 대화를 제안하여 고위급 접촉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후반 들어 북측이 수습 발의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 및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상징적 기념일이 있고 남북한 모두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기대감이 존재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3년이 지나 4년차에 접어들기에, 국제사회의 고립 탈피와 외자유치 등 본격적인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편 남한도 여야와 언론사들의 유연한 대북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시적인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9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2015년 남북관계 전망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은 대해 전문가들의 과반수(51.7%)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연초 전망치에 비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되었다. 연초 결과 전망치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81.8% → 51.7%)은 급감한 반면, 현 수준 유지(14.8% → 37.4%)와 부정적(3.4% → 11.0%) 응답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이는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대북 전단 살포와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 발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 남북관계 전망 〉

	2014년전망	2015년 전망			
	2014.3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좋아질 것이다	81.8%	51.7%	62.1%	50.0%	42.9%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	14.8%	37.4%	34.5%	38.2%	39.3%
나빠질 것이다	3.4%	11.0%	3.4%	11.7%	17.9%

2015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47명의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등 경제 부문에서 가장 먼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 부문 다음으로는 사회문화 부문, 정치·군사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군사 부문이 상이한 체제와 이념 등의 정치·군사 부문보다 성과 도출이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부문에도 높게 응답하였다.

## 〈 우선 성과 도출 부문 〉

	종합	2015년 전망		
		보수	중도	진보
경제 부문(남북 경협)	66.0%	83.3%	64.7%	41.7%
사회문화 부문	23.4%	11.1%	23.5%	41.7%
정치·군사 부문	10.6%	5.6%	11.8%	16.7%

남북대화 성사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과반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남북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화를 제안할 경우, 전문가의 3/4(76.9%)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남북대화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고위급 접촉이 열려야 남북 공동의 광복 70주년 행사와 후속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및 대화 중단이란 부정적 응답률도 20%를 초과했다.

## 〈 남북대화 성사 예상 시기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올해 내에	4.4%	10.3%	2.9%	0.0%
내년 1/4분기 이내	20.9%	13.8%	32.4%	14.3%
내년 상반기 중	51.6%	58.6%	35.3%	64.3%
내년 하반기	14.3%	17.2%	14.7%	10.7%
현 정부 임기 내에 고위급 대화 없다	8.8%	0.0%	14.7%	10.7%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의 절대 다수 (94.5%)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화해협력 방향으로의 전환과 유연성 발휘를 주문했다. 이는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 주요 언론에서도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하다	62.6%	41.4%	52.9%	96.4%
다소 필요하다	31.9%	44.8%	44.1%	3.6%
별 필요 없다	4.4%	13.8%	0.0%	0.0%
전혀 필요 없다	1.1%	0.0%	2.9%	0.0%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복원 등 경제 부문에서의 교류 협력이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25.8%)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 (16.5%) 등 남북경협 복원이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함으로써, 이는 경제 부문의 성과가 우선 도출될 것이라는 앞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호 비방 중단(15.9%)’ 과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 회담 추진(13.7%)’ 을 남한의 매우 중요한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는 ‘5.24 조치 해제’ 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 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신뢰 회복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 〉

	총 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일반교역) 재개	25.8%	17.2%	25.0%	35.7%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회담 제의	16.5%	15.5%	19.1%	14.3%
상호 비방·중상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등)	15.9%	8.6%	17.6%	21.4%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	13.7%	19.0%	11.8%	10.7%
사회·문화 교류 확대 (문화·예술·학술·스포츠 등)	8.8%	12.1%	11.8%	1.8%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8.2%	15.5%	5.9%	3.6%
개성공단 사업, 1단계 조기 마무리와 2단계 추진	4.9%	3.4%	4.4%	7.1%
6자회담 재개 추진 (先 6자회담, 後 북한의 가시적 핵포기 요구)	3.3%	3.4%	1.5%	5.4%
새로운 남북경협 사업 제안 (SOC투자 확대 등)	2.7%	5.2%	2.9%	0.0%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신뢰 회복을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14.8%) 등에서의 가시적 조치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확대(14.3%)’ 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요구 수용(13.7%)’ 에도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성향별로는 보수, 중도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표시를, 진보는 핵문제와 이산가족, 개성공단 등 정치·사회문화·경제 부문을 골고루 지적했다.

## 〈 신뢰 회복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 〉

	총 합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시	20.9%	24.1%	23.5%	14.3%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14.8%	12.1%	14.7%	17.9%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확대	14.3%	17.2%	10.3%	16.1%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요구 수용	13.7%	12.1%	11.8%	17.9%
금강산관광 3대 선결과제 해결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11.0%	15.5%	13.2%	3.6%
3통 해결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협력	11.0%	5.2%	10.3%	17.9%
대남 도발 중단 선언	8.8%	5.2%	11.8%	8.9%
대북 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2.2%	1.7%	2.9%	1.8%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노력 선언	3.3%	6.9%	1.5%	1.8%

5.24조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남한의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한 先後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 해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10명 중 약 9명(87.9%)은 남북한 양측에게 어느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며 남측의 유연한 접근 자세를 요구했다.

## 〈 5.24조치 해결 방법 〉

	총 합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나가야 한다	87.9%	69.0%	94.1%	100.0%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는 안된다	12.1%	31.0%	5.9%	0.0%

###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해선 상당수의 전문가(73.6%)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4명 중 3명은 5.30 개혁 조치와 19개의 경제개발구 지정 등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의 정책 변화 속도와 폭이 확장적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명중 1명(26.4%)은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제한적이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 〈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평가 〉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된다	73.6%	69.0%	64.7%	89.3%
특별한 의미는 없다	24.2%	31.0%	32.4%	7.1%
부정적 방향으로 평가된다	2.2%	0.0%	2.9%	3.6%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선 절대 다수의 전문가(98.9%)들이 개혁·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에는 3년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과 가시적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86.8%)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본격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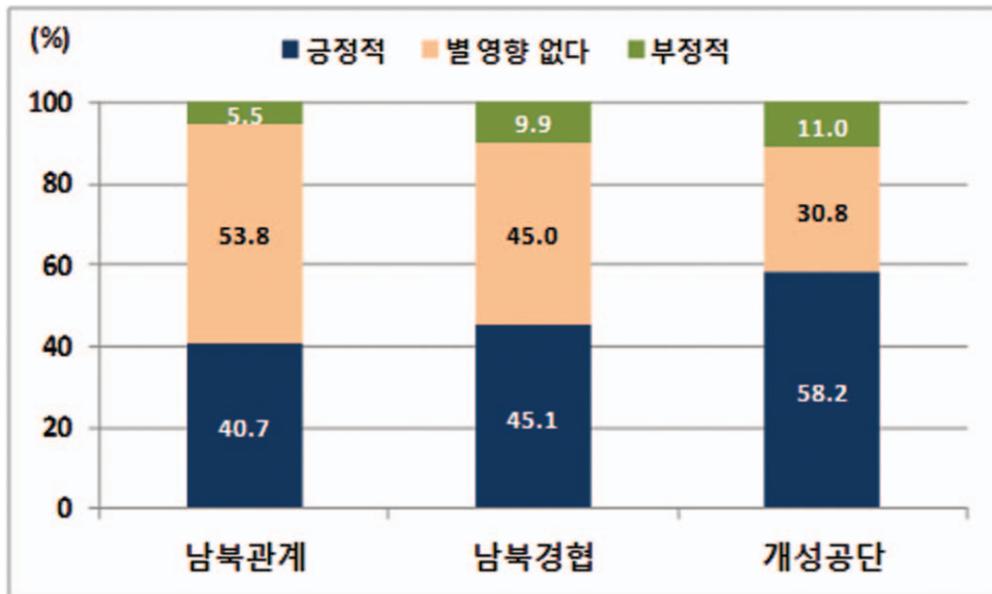
#### 〈 향후 개혁·개방 확대 여부 〉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제한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86.8%	89.7%	88.2%	82.1%
본격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다	12.1%	10.3%	8.8%	17.9%
오히려 축소할 것이다	1.1%	0.0%	2.9%	0.0%

한중 FTA와 개성공단

한중 FTA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중 FTA 체결은 남북간 정치적 관계보다는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 분야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공단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이를 겨냥한 중국 및 서방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한중 FTA의 영향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 중단(2013. 4) 이전 결과와 비교해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현 상태 유지’나 ‘축소’ 응답자는 13.2%에 불과하다. 성향별로는 진보(96.4%)와 중도(91.2%)는 절대 다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도 10명중 7명 이상으로 상당수의 전문가가 확대를 주장했다.

##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 〉

	종합 (’12.11)	종합 (’14.12)	보수	중도	진보
점차 확대돼야 한다	84.6%	86.8%	72.4%	91.2%	96.4%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2.5%	12.1%	24.1%	8.8%	3.6%
점차 축소해야 한다	2.9%	1.1%	3.4%	0.0%	0.0%

##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광복 70주년 행사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약 9명(89.0%)이 2015년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할만한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남북관계 장기 경색 국면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이를 풀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현실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향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도(91.2%), 진보(89.3%), 보수(86.2%)가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 공동 행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필요성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	53.8%	31.0%	58.8%	71.4%
다소 필요	35.2%	55.2%	32.4%	17.9%
보통	5.5%	3.4%	5.9%	7.1%
별 필요 없다	5.5%	10.3%	2.9%	3.6%
전혀 필요없다	0.0%	0.0%	0.0%	0.0%

광복 70주년 행사 제안과 관련하여 만약 공동 기념행사가 열릴 경우,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상징성과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제안이 많았으며, 특히 DMZ 관련

공동행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의 남북공동기념문화행사 제안과 맥락을 같이하며, DMZ 행사는 ‘광복70년-분단 70년’이란 상징성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문별로는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DMZ 행사가, 경제 부문에서는 철도연결이,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제안 비율이 높았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평화음악회 등 DMZ 행사를 비롯해 경평축구대회 등의 체육 행사에 대한 제안율이 높았으며, 학술 및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도 다수가 제안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식(기존의 경의선 재개 및 새로운 철도 연결 등)과 개성공단 제2단계 착공식,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높은 제안율을 보였다.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고위급 회담과 군사실무 회담 등이 제안되었다.

### 〈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주요 제안 내용 〉

	주요 제안 내용
사회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공동행사 : 평화음악회, 생태 사진전, 공동조사 등</li> <li>- 체육 : 경평축구대회 개최(남·여 대항전), 양궁·탁구 등 공동 체육행사 (일반인과 선수 참여), 남북 마라톤 대회, 남·북·중 체육대회 등</li> <li>- 학술 : 부문별 공동 심포지엄(정치, 경제, 사회 등), 남북 청소년 학술 경연대회, 남북한 고구려유물 순회 전시회 등</li> <li>- 문화·예술 : 광복 드라마, 영화 등 문화예술작품 공동 제작, 예술인 상호 방문, 남북 합동악단 세계투어, 독립운동가 합동 추모비 건립 등</li> <li>- 인도주의 :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귀환 국군포로 환영 행사, 북한주민 보건개선 지원 등</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철도 연결식, 개성공단 제2단계 착공식, 금강산관광 재개</li> <li>- 북한 경제인 초대, 백두-한라 상호 교환 관광 등</li> </ul>
정치 · 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군사실무회담 등</li> <li>- 평화조약, 비핵화 선언, 상호 비난 금지조약 등</li> </ul>

주 : 굵은 고딕체는 각 부문별로 제안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

## 시사점

첫째,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화해협력 방향으로의 대북정책 전환과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의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대화 성사 예상 시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경제·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 회복 노력과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정치 군사 부문의 상호 신뢰 회복 성과 도출이 용이한 만큼, 남측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회담제의 등을 주장했다.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로는 평화음악회와 생태 사진전 등의 DMZ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경평축구대회, 남북한 철도연결식과 개성공단 2단계 착공식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성과 도출로 추진 의지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방향이 긍정적이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지속 확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 경협 사업 추진과 함께, 개성공단과 남북관광 사업 재개를 통한 경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도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2단계 착수 등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사업을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키고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 허용과 함께, 현재의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물류·관광·상업 기능이 포함된 '통합형 개성지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공단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이를 겨냥한 중국 및 서방 기업들의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간 정치·군사적 제약 요인에 연계된 대남 투자 제약은 자칫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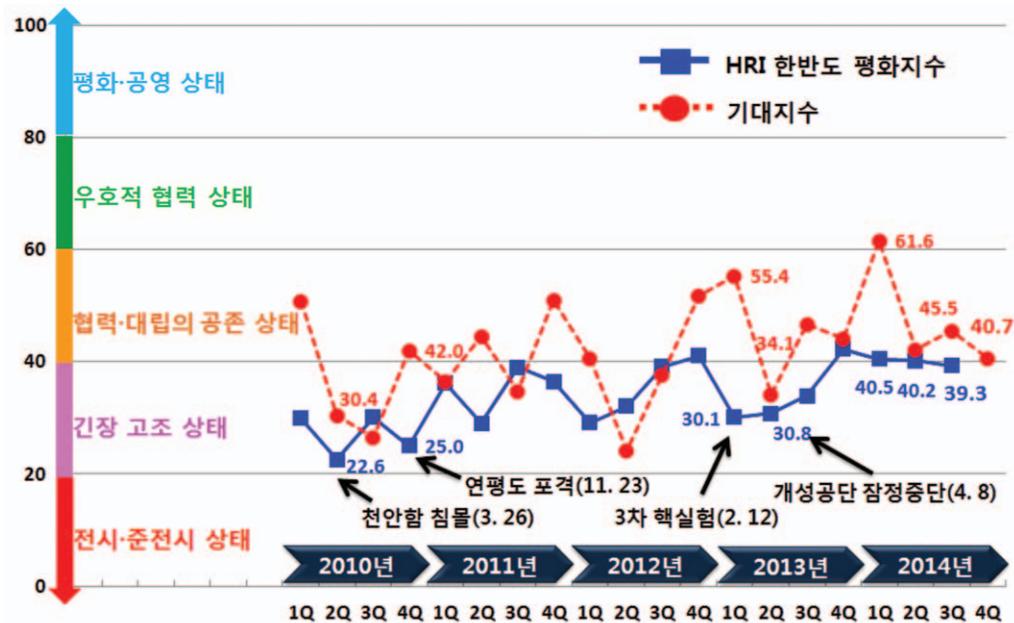
2014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39.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고조 상태’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0.3p 하락해, 올 들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과 아시안 게임 응원단 불참, 대북 전단 살포와 8월말의 한미연합군사훈련(UFG)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4/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4.8p 하락한 40.7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4/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평가로 반전하였다. 이는 북한 실제 3인방의 깜짝 방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직적인 대북정책 원칙 고수와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북한 인권 거론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반발 등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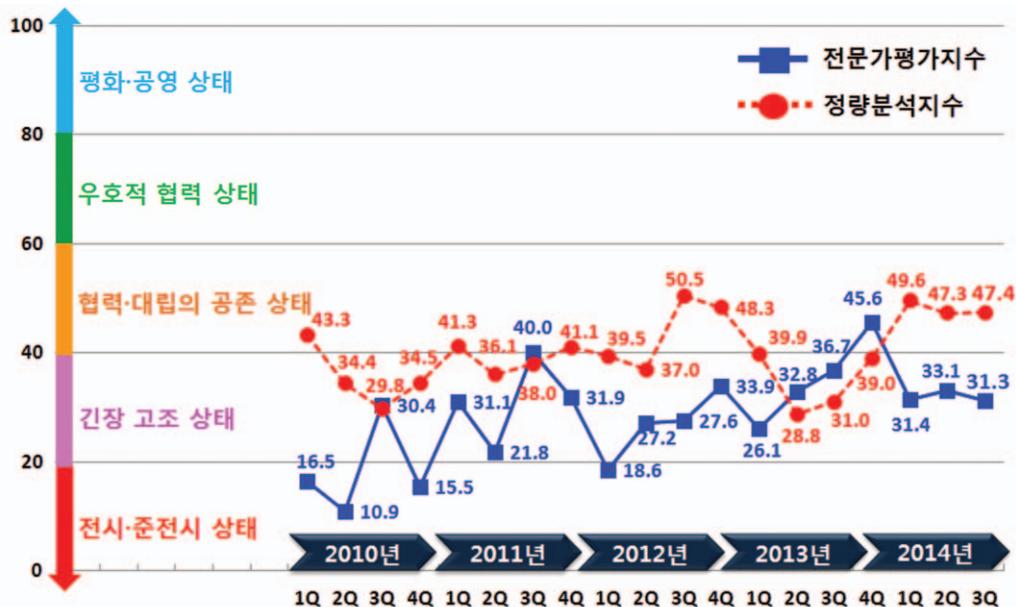
###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지수는 회복한 반면,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체감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평가지수(2014년 2/4분기 : 33.1 → 3/4분기 : 31.3)의 경우 총 91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으로써 연초 이후의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4분기 대비 1.8p 소폭 하락한 31.3을 기록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8.15 기념일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상호 비방과 갈등 국면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3/4분기 정량분석지수(2014년 2/4분기 : 47.3 → 3/4분기 : 47.4)는 지난 분기와 비슷한 47.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 장기 경색 국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정량지수의 하락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비난 등에 따른 긴장 고조와 함께, 우리 정부의 유연성 발휘 미흡 등으로 '이벤트 지수'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

〈 2010~2014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 전문가 설문조사

이벤트지수(2014년 2/4분기 : 46.8 → 3/4분기 : 46.3)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아시안게임의 응원단 불참,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등으로 0.5p 하락하였다. 다만 종교단체의 방북 허용과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유치 노력,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실사단 출발 등은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교류지수(2014년 2/4분기 : 47.7 → 3/4분기 : 48.5)는 지난 분기에서 0.8p 소폭 상승한 48.5를 기록했다. 교류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사업의 생산 활동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인도적 지원 등 여타 부분의 교류협력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4분기에는 남북교역(2/4분기 5억 2,360만 달러 → 5억 8,725만 달러, 12.2% 증가)이 증가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전 분기 대비 90만 달러 감소)과 이산가족 교류 지원액(전 분기 대비 15억원 감소)은 감소하였다.

〈 2010~2014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평가

전체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 하락 속에, 진보 성향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 성향은 평가지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반되게 평가하였다.

2014년 3/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진보와 중도는 각각 24.4, 34.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7.1p, 1.4p 하락한 반면, 보수는 36.6으로 오히려 4.0p 상승하였다. 특히 진보 성향은 현재 상황을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2013년 1/4분기(24.5)와 유사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4/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진보 성향은 11.0p 대폭 하락한 33.4인 반면, 보수 성향은 46.2로 1.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진보의 경우, 고위급 접촉 무산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반발과 개성공단 임금 규정의 일방적 개정 등으로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보수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등을 긍정 평가함을 의미한다.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가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39.3 (▽0.3)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0.2 (▽0.3)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0.5 (▽1.8)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42.3 (▲8.4)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